

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돌입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기로 홍영표 “한국당, 7월 국회 단독 소집 안한다고 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첫 회동에서 ‘빠’ 있는 모두발언을 주고받으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첫 회동에서 ‘빠’ 있는 모두발언을 주고받으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민중당은 앞서 문화상 의원을 국회 의장 후보로 정해왔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외정

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반기 원구성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을 그대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여야는 이르면 28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상경계 성격으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분리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 사법개혁특위 연장 등 각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일방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 요구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단 국회 정상화가 지연될 수도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7월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월 국회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오늘 다른 당 사정도 듣고 그러니깐 저는 이번주말까지 마무리해서 7월초에는 국회 정상화를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금요일까지 수석 협상을 해야 한다’고 여지를 줬다.

7월 국회 소집 시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했다”며 “원구성에 대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첫번째 본회의 날짜를 잡아야 한다. 명확하지 않으니 7월 국회는 지금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한국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확보해야 할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4년 동안 가장 어려운 협상이 원구성이다. 내가 이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 안하는 것이 빠른 합의에 도움이 된다’며 ‘협상장에서 서로 주장도 하고 실득도 해야지 밖에서 말하는 것은 협상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원 구성 협상을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광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여야는 협상에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한다.

민주 ‘지방 정부 비전과 혁신 TF’ 설치

민주연구원·정책위 등 공동 참여 8월 25일까지 활동 전국대의원준비위원회에 박해철 전국노동위 상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정부의 비전과 혁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지방정부 비전과 혁신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비전과 혁신 TF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주무 기관은 민주연구원이 담당한다. 활동은 8월 25일까지다.

아울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대) 위원으로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했

다. 또 전대 준비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각각 남인순 정재호 의원이 맡는다, 조직분과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위원 윤준호,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 서형수·위원 재운경, 당헌·당규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위원 정준숙,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민병두·위원 김종민, 당무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조영천·위원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이날 최고위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차 회의도 보고했다. 그 결과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는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대상이며 신청기한은

이날 정오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win.themail.kr)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비는 100만원이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의 경우 2분의 일을 감액하기로 했다.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서류 심사와 지역 실사,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 실사는 복수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단수지역도 정밀 검증 등 조강특위의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정 방법은 조강특위 만장일치(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비밀투표나 채점으로 단수 및 경선후보를 결정한다. 지역위원장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김성환 의원을 임명했다. /뉴시스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영장청구 이후 소위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났다.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의한 것이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왔던 것으로 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법원이 정하는 날에 뜻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법원 “하드디스크 못준다”

검찰 수사 비협조 속내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1주일만에 응답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내부 기밀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결국 건네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 등이 검찰에 넘어갈 경우 발견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료만을 제공해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검찰에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임의제출을 하는 것인데 그와 무관한 자료가 훨씬 많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달라고 하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내부 자료를 다 가져가는 것은 검찰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범위로 지극히 한정됐다. 특별조사

특별조사단 조사 ‘410개 파일’ 원본 등만 제공
‘법원 내 기밀 문건 검찰 손에 들어갈까’ 우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도

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으로 분류한 410개 파일 원본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5개 저장매체(HDD·SSD)에서 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관련성 자료다.

관심이 집중됐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일체 포함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 특별조사단이 확보했던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1심의관 2명의 8개 저장매체도 제출되지 않았다. 공용이메일과 공용폰 기록,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도 제외됐다.

법원행정처가 이처럼 자료를 극히 제한한 것은 법원 내부의 민감한 정보나 기밀 문건이 검찰 손에 넘어갈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수십만개의 파일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고위 법관들의 개인신상 관련 자료나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법원 내부 비밀

힘싸일 수 있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에 준 자료는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일체 포함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 특별조사단이 확보했던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1심의관 2명의 8개 저장매체도 제출되지 않았다. 공용이메일과 공용폰 기록,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도 제외됐다.

법원행정처가 이처럼 자료를 극히 제한한 것은 법원 내부의 민감한 정보나 기밀 문건이 검찰 손에 넘어갈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수십만개의 파일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고위 법관들의 개인신상 관련 자료나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법원 내부 비밀

법원행정처는 “파일에 대한 관리 자료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에 관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ijmaeil.com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립대학교
풍격서전주